

미래포럼 세미나

2025.04.11.

발표: 구해근, “한국민주주의의 퇴행과 극복 방향: 사회학적 고찰”

토론: 김희강

1. 현재 한국 민주주의와 한국 정치에 대한 평가는 세 가지로 나눠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1)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이 목격한 한국정치의 최근 과정,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경험한 윤석열 정부의 탄생과 탄핵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매우 지난했다. 국민의 입장에서 이러한 지치는 경험들, 이런 경험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험/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볼 때, 현재의 한국 정치가 일면 어둡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 (선생님께서 첫 번째 이슈에서 다루신 후진적 한국정치와는 다르게 현재 한국정치의 긍정적인 면/선진적인 면이 있다고 본다) 현재 한국은 누가 뭐래도 공고화된 민주주의 체제를 갖춘 국가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여러번의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뤄낸 민주주의 국가이다. 물론 최근 한국 정치는 격동의 시간을 보냈다. 10년 사이 2명의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그 과정은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과 고난한 과정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일련의 과정은 혼란이라기보다, 이를 통해서 한국 민주주의가 성숙해졌으며 보다 안정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국 민주주의가 성숙했으며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남미의 여러 국가들이 보인 수십번의 끝없는 구테타 시도와 독재라는 쳇바퀴와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 한국의 대통령 탄핵은 우리가 만든/우리가 동의한 헌법과 절차 속에서 정상적으로/합법적으로 이뤄지는 민주제도 회복력을 믿고 기다리는 과정이라고 본다.

2) 둘째, 이번의 계엄 사태는 45년전 계엄하고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다. 이 또한 그 사이 성숙된 한국 민주주의/한국 정치를 증빙한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판결문에서도 보여주듯이,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이 수행 덕분이었다고” 언급한 것처럼, 시민도 군도 위법한 계엄에 저항하고 복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시민과 민주적 군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민주공화정의 가치, 그리고 공권력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면 국민은 언제든지 심판할 수 있는 있다는 인민주권의 원칙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민주공화정의 역사는 국민이 곧 국가(왕/짐이 곧 국가라는 것이 아니라)라는 자명한 사실을 제도화시키는 도전과 투쟁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자명

한 사실은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우리고 숨쉬고 있는 공기처럼) 자주 곧 잊기 쉬우며, 몇 명 위정자는 권력을 잡으면 권력을 영속화하려하고, 국민들 역시 그 권력기관들의 농간에 쉽게 기만을 당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의 계엄 사태로 민주정체를 뒷받침하는 민주공화정과 인민주권의 원리를 민주시민에 의해 더 깊이 되새기고 다음 세대로 전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3) 셋째, 이번 계엄과 탄핵 사태를 보면서 한국정치의 새로운 정치적 동력과 변화의 가능성을 보인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20-30대 젊은 세대들, 특히 20-30세 청년 여성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정치참여 집단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청년 여성들의 정치집단화/세력화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하지만 이전까지는 해화역 시위, 미투 시위, 강남역 시위처럼 주로 젠더이슈에 한정되어서 목소리를 내곤 했었다. 하지만 이번 계엄/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이들이 일반적인 대중정치에 보다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주체와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싶다. 물론 이 자체로 선불리 이들의 향후 정치행보나 향후 정치세력으로서의 가능성을 진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 최근 사회학자 홍찬숙 선생님의 <젠더 갈라치기 정치>에서 보면, 이들의 정치적 가시성을 좋게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이들이 이념 갈등/혹은 젠더 갈등의 도구로 활용되거나/동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세력으로 성장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한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하지만 청년 여성의 정치적 주체화는 한국 민주주의 미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정치 공론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계속 주목해야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2. 이제까지는 한국 민주주의와 한국 정치에 대한 다소 긍정적인 측면을 다루었다면, 이제는 한국정치/민주주의가 극복하고 전향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지점,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이슈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한다. 세 가지이다.

1)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이슈인 한국의 정치문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 역시 동의한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나와 다른 의견도 경청할 자세가 필요하며, 내 쪽에 더 힘이 있더라도 공익을 위해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 정치판을 보면 이런 대화, 협상, 자제의 미덕이 보이지 않는다” 고 언급하셨다. 나와 다른 상대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한 채, 그럼에도 함께 대화하고 협상하고 양보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태도/자질/풍토/문화가 한국사회에 점점 고갈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것이 단지 정치문화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한국 사회 전반에 거의 모든 영역과 관계에서 보이는 병리적인 증상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그 이유를 사회 전반에 깊숙이 침투하여 있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본다. 우리 모두가 경쟁자이고, 남을 이겨야 내가 살 수 있는 경쟁문화, 각자도생/자력갱생의 풍토에서는 남과 타인, 관계와 이웃, 공동체와 공동선에 대한 생각과 이해를

할 여력이 없어진다. 특히 한국은 IMF 이후 신자유주의 경향의 여파로 이러한 개인주의/성과주의/경쟁주의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신자유주의는 개인을 극단적으로 이기적으로 만들고 고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세번째 이슈로 말씀하셨듯이) 경제와 사회를 양극화시키고, 미국/서구에서 볼 수 있는 지역적 segregation을 한국 사회에도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만들었다. 소위 임대주택이나 빌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아이들을 폄하하고 낙인찍는 표현들이 서슴지 않게 생겨나고(LH 거지/임대주택 거지=임거), 그들과 구별되며 섞이지 않으려는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 이기주의 양상들을 신문 기사로 자주 나온다.

한국 사회 전반의 새로운 가치지향과 규범에 대한 논의가 정말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타인과 함께 사는 사회, 우리 공동선에 대한 이해, 상호의존적인 관계와 가치지향, 돌봄과 연대의 가치에 대한 논의가 한국 사회에서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점에서 선생님께서 다섯 번째 이슈로 말씀하신 시민사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2) 두 번째는, 사회의 새로운 가치지향과 규범에 대한 논의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요구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교육, 우리가 어떤 시민을 어떤 가치로 길러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중앙대 김누리 교수님의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책을 보면, ‘인간 존엄은 불가침하다’라는 독일 헌법 제1조에 근거한 독일 교육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모든 독일교육은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가치 속에서 진행된다고 설명한다. 모든 교육이란 인간 존엄을 기르고, 지키고, 실현하는 교육이며, 그 속에서 사회가 원하는 시민상을 길러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인간이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존엄한 존재로서 아이들의 자존감을 강화시키고, 타인을 존엄한 존재로 대하는 태도를 가르치는 것이 독일 교육과 시민교육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지금이야 말로 한국 사회에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경로재설정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3) 마지막으로 한국 민주주의가 극복해야 하는 지점으로 젠더 이슈/불평등/양극화를 언급하고 싶다. 현재 한국은 어찌되어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현재 한국은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의 경제발전 국가, 드라마 ‘오징어 게임,’ 영화 ‘기생충’ 및 아이돌 그룹 BTS로 대표되는 문화발전 국가,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복지보건 국가, 선도적인 미래형 IT기반의 기술발전 국가, 여러 번의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뤄낸 민주주의 정치발전 국가로 불린다. 하지만 동시에 현재의 한국은 또 다른 어두운 이면이 존재한다. 지난 20년 간 여성 고용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남녀 가사 및 육아시간 격차, 남녀 임금 격차, 유리천장 지수, 여성 고위직 진출률 등의 분야에 있어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많은 여성들이 가부장제와 성별분업 체제의 편입을 반대하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4B 운동(비혼, 비출산, 비연애, 비성관계)’을 진행, 전파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로 거의 세계 최저이다.

최근 신영민·김태일(2022)의 논문은 언급한 한국의 이면을 분석하는데 유의미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보여준다. 이들에 따르면, 돌봄노동자의 임금패널티는 국제적인 현상이지만 유독 한국의 돌봄직-비돌봄직 임금격차는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크다는 것이다. 한국의 아동분야 돌봄 일자리는 비돌봄 일자리보다 시간당 임금이 46.2% 낮았는데, 이는 다른 국가의 임금격차(덴마크 6%, 프랑스 12.9%, 일본 19.6%, 영국 24.8%)보다 훨씬 크다는 분석이다. 이들의 연구는 언급한 한국의 이면과 그 원인을 모두 설명해주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한국에서 보이는 높은 돌봄 패널티는 돌봄을 주로 맡는 그래서 높은 가사 및 육아 노동시간을 할애하는 한국 여성의 (남성에 비해) 낮은 고용율,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낮은 평균 임금, 낮은 고위직 진출률, 그리고 한국의 낮은 출산율 등에 대한 직간접적인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1945년 해방 이후 진행된 한국의 국가건설은 일면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돌봄의 시각에서 본다면 다시 말해 여성과 가정에 돌봄책임이 가중되는 현실, 가정과 시장의 돌봄제공자가 겪는 차별과 불이익, 그래서 이제는 누구도 결혼·출산·돌봄을 맡기를 기피하는 현실 등에 대한 문제의식과 고민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